

호남의 충성은 남았고, 공천 분노는 터졌다

- 김관영 41.78%는 어떤 숫자인가

전북은 이번 선거의 가장 독특한 권역이다. 광역단체장에서 무소속 후보가 41.78%를 받은 권역은 전국 어느 곳에도 없다. 이번 편은 그 41.78%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한다 — “효능감”이나 “구조적 이탈”이 아니라, 중앙당 공천 개입에 대한 “도민 심판·반청 결집”의 일회성 바람이었음을 데이터와 언론보도로 교차 검증한다.

● 사건의 시계열: 04월 01일 제명 → 05월 07일 출마

일자	사건
04/01	민주당 중앙당 공천을 둘러싼 대립 끝에 김관영 현직 지사 제명(조선일보)
05/07	김관영 무소속 재출마 선언 — 구호에 “중앙당 공천 개입 도민 심판”, “정청래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선택한다”(중앙일보)
05월 중순	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전북 민주당 당원의 38.5%,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41.4%가 김관영 지지로 응답(비즈니스포스트)
선거 막판	김관영 유세에서 “당선되면 정청래 사퇴해야 한다”, “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심판” 표명(MBC)
06/03	결과: 이원택(민주) 51.22%(473,436표) vs. 김관영(무소속) 41.78%(386,152표)

● **본투표 +17.19%p: 분노와 위기감 동시 폭발**

지표	값
민주 기초단체장	67.63% (619,005표)
민주 광역단체장	51.22% (473,436표)
기초-광역 차이	+16.41%p, +145,569표

기초단체장에서는 광역단체장보다 14만 5천여 명의 민주 계열 표가 더 나왔다. 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대다수 민주당 공식후보가 차지했기 때문이며, 김관영의 41.78%가 “민주당에서 구조적으로 이탈한 표”가 아니라 “중앙당 공천에 대한 항의”임을 증명한다. 기초에서는 큰 이변이 없었다.

● **김관영 41.78%: 호남에서 무소속이 받을 수 있는 상한선**

전북 41.78%는 다음처럼 읽혀야 한다.

- 구조적 민주 이탈이 아니다: 기초단체장 67.63%가 증명.
- 효능감 종류가 아니다: 세종·대전·충남·경기처럼 “국정 운영 기대”와는 메커니즘이 다르다.
- 조건부 반(反)청: “이재명·민주당 자체에 대한 불신임”이 아니라 “정청래가 주도한 공천 설계에 대한 심판”.
- 계파 주도권 구조 재편 움직임: 명시적으로 8월 전당대회를 결전장으로 설정.

● **김관영이라는 변수의 장기적 함의**

전북 사례는 다음 장기 함의를 남긴다.

1. 호남에서도 현직 프리미엄보다 “공천 정당성”이 우선한다. 이는 국힘 경선 구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명제다.
2. “공천 설계 심판” 프레임이 제대로 세워지면 매우 위협적. 향후 민주당 공천 룰 설계 시 지구당·현직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시키는 채널이 필요.
3. 8월 전당대회의 동학이 핵심 후속 이벤트: 정청래 체제가 유지되면 전북의 “반청” 결집이 타 지역(호남 외 경선·지구당)으로 파급될 가능성 있음.

전북 41.78%는 “민주 이탈”이 아니라 “민주 내 공천 권력에 대한 견제”라는 것이 해석의 핵심이다. 이는 친청계, 김어준 유튜브 주류의 강성 지지층이 주도한 공천 설계가 지역 현장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당 자체 자동 면역기능 신호로 볼 수 있다.

공공정책·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

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/ 가장 정확한 조사
지자체,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, 빅데이터 분석, 여론조사, 선거컨설팅
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, 정우빌딩 9층(여의도동 13-25)